

생산일: 2000.4.18

이 자료는 4.18(수) 16:00 이후
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報 道 資 料

제목: 김진표 재정경제부차관, 금융부문 노사협력 증진
을 위한 연찬회 강연

主要内容

□ 김진표(金振杓) 재정경제부 차관은 4월18일 16:00~17:30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동부 주최 「공공·금융부문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연찬회」 초청으로 “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금융정책방향”이란 주제로 강연하였음

□ 동 연찬회에는 은행, 증권, 투신, 보험, 종금, 리스, 카드사 등 150여개 금융기관의 노무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이 참석하여 강연을 들었음

※ 참고로 동 연찬회는 노동부 주최, 노동교육원 주관으로 노사관계 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증진과 임금·단체협상의 원만한 마무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·금융기관 노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, 금년 세번째로 열리게 되었음

<강연원고: 별첨>

보도자료 생산과: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(500-5341~3)

(금융정책과장 최중경, 사무관 송진혁)

금융부문 연찬회

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금융정책방향 .

2001.4.18(수)

재정경제부차관

김진표

I. 인사말

□ 김진표 재정경제부차관입니다.

□ 먼저, 금융기관의 여러 경영진들을 모시고 연찬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○ 벌써 3년째를 맞이한 이 연찬회를 통해 경영진 여러분들과의 상호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, 우리 금융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

II. 금융구조조정의 추진과 성과

□ 우리 경제가 IMF위기를 맞이한 이후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시중 자금중개기능의 마비였습니다.

□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

- 우선, 금리안정기조의 정착을 통해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
 - 시중 신용공급 기능의 마비와 기업자금공급기능의 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rimary CBO제도,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 확대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.
 - 보다 넓게 보면 공적자금의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고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도 시중자금이 제대로 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 -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금융중개기능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고, 위축된 경기도 그 둔화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아직도 우리 경제에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
- 금융중개기능도 적지 않은 불안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□ 따라서, 금년에는 그동안 추진된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시장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제와 제반산업의 체질을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동시에

○ 금융중개기능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

□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의 금융부문의 과제를 살펴 보기에 앞서 그간의 금융구조조정 추진노력과 성과를 먼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.

○ 97년말 이후 지난 2월말까지 537개의 금융기관이 합병, 계약이전, 청산 등의 방식으로 퇴출되었고

○ 이 과정에서 6만 7천여명이 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떠났습니다.

○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난해말 까지 129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.

- 이와 함께 충당금적립제도, 적기시정조치제도 등을 국제기준(Global Standard)에 맞게 바꾸고, 특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공시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.
- 이와 함께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(FLC)을 도입하고,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하며 수익성 지표를 분기별로 공표토록 하는 등 금융기관도 시장의 힘에 의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이처럼 금융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기희생과 인내심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노력한 결과 99년과 2000년도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.
- 우선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98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10.9, 8.8%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는 등 실물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으며,

○ 위기직전 40억불수준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고도 2000년말 현재 962억불로 증가하였습니다.

○ 특히 투기등급이하로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도 우리의 구조조정노력을 높게 평가하여 투자등급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회복추세에 있습니다.

□ 금융기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“대마불사”의 낡은 인식이 타파되고, 금융기관 종사자 모두가 부실의 제발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, 지난 수년간의 혹독한 구조조정의 경험때문인지 몰라도 기업 여신보다는 가계여신에 중점을 두고, 신용 평가에 의한 대출보다는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한 안전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

○ 선진금융기관과 비교할 때는 IT(정부기술) 투자규모도 영세한 수준이며, ROA와 ROE 등 수익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지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○ 아직도 우리 금융산업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겠습니다.

Ⅲ. 금융부문의 현안과 정책과제

(상시 구조조정 체제의 정착)

- 지금까지 3년여에 걸쳐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을 기울여 왔고, 항간에서는 개혁의 피로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합니다만,
- 제가 볼 때는 금융구조조정의 '성과'는 있을 수 있어도 금융구조조정의 최종적 '완결'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.
- 구조조정은 우리 금융기관이 계속기업(going concern)으로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야 하는 상시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.
-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하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불투명하거나 부실화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즉시 교정을 받게 됩니다.

- 내부에서는 권한이 확대된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와 소액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 등을 통한 견제장치가 작동하고

- 외부에서는 경영정보의 정기적 공표를 통해 외부견제장치가 작동하여 끊임없이 합리적인 경영을 요구받게 되며, 부실화될 경우에는 감독 당국에 의해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하게 적용받게 됩니다.

□ 이러한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는 과거 위기극복시의 정부주도 구조조정과는 달리 시장 스스로의 '보이지 않는 손(invisible hand)'에 의해 추진될 것입니다.

○ 상시적 구조조정체제가 작동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퇴출에 따른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.

(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)

□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.

○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, 겸업화가 이루어지고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.

- 은행의 경우 최근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함께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고,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, 신한은행의 지주회사 설립 추진 등 자발적인 대형화·겸업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

○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, 기본적으로 중복투자부문의 축소와 대형금융기관의 시장선도기능 등을 통해 전체 금융산업에 상당한 (+)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○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은행이 각자 특성과 전략에 따라 기업금융이나 소매금융에 특화하는 한편, E-Banking System과의 접목을 통해 국제 수준의 금융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.

- 비은행의 경우에도 규모와 경영능력에 맞춰 특정 업무에 전문화하거나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나름대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.

(금융시장 진입과 퇴출의 원활화)

-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쟁력제고차원에서 진입과 퇴출기준도 금융감독, 시장투명성 등 제반 여건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진퇴의 자유를 확대하여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.
- 정부는 먼저 자본금 요건 등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선진금융에 밝은 금융전문가들의 창업을 촉진해 나갈 것이며,
- 부실금융기관이 큰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상시적인 체제에 의해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.

-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된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되지 않으면 자칫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큰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.
- 이 경우 어떤 금융기관이 부실한지 여부를 객관적인 회계감사시스템, 신용평가제도 등 시장시스템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고,
- 그 처리도 이해당사자간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자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.
- 특히,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M&A를 통한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제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.
- 다만, 시장에 의한 신속한 판단이 지체되어 시장 실패(Market Failure)가 우려되는 경우에는
- 정부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여 시장기능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.

(기업자금조달 애로에 대한 대응)

□ 이처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금융중개 기능을 효율화해 나가는 동시에

○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요인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.

□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.

○ 금융기관은 종전 벤처산업과 같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견인차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존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간과해 왔거나 숨겨진 경쟁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수익창출의 원천으로 삼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.

○ 정부도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 나가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용경색현상을 최대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.

- P-CBO,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등 기추진중인 대책을 중심으로 중견 대기업등의 회사채 차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.

- 또한,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금년중 최대 54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벤처기업등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.

(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)

□ 금융기관의 여신관행이 담보대출중심에서 신용대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선진적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.

□ 차주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신용평가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, 금융기관의 여신은 언제든지 부실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.

- 단지 담보만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.

- 차입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을 게을리하고, 금융기관은 담보를 중시하고 공공부문의 신용보증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악순환이 형성되면 우리 금융의 선진화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.

□ 제대로 된 신용평가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는 핵심적 장치중의 하나입니다.

- 각 금융기관이 자기 회사에 적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은

-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.

□ 이러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은 앞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.

(금융구조조정과 인력조정)

□ 끝으로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인력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○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력의 원천은 인적자원(Human Resources)입니다.

○ 금융기관이 인적자원을 제대로 키워야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.

○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훌륭한 인적자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 하고 하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,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.

□ 그러나, 현재 종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경영해 나가고 싶지만 구조조정을 하거나, 조직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감축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저는 미국 노동성에서 발간한 “Guide to Responsible Restructuring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 자리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.

『 - 먼저 조직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하고, 사람이 절감되어야 할 비용이라기보다는 개발되어야 할 자산이라고 보는 기업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.

- 또한, 구조조정 등의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과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,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.

- 만일 인력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이 불가피하다면 일련의 우선순위들을 마련하고 원칙을 고수해야 하고, 종업원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야 하며,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재정적 원조나 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.

- 잉여노동력의 재훈련과 재배치를 통해 그들이 고용 안정을 확신하고 자기신뢰(self-reliance)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, 남게 된 종업원들에게는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, 그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.]

IV. 맺음말

□ 지금까지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
-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기관은 대형화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,
-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나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.
- 특히,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 측으로서 기업의 희생가능성에 대한 판단능력을 제대로 키우는 동시에

-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기업처리에 따른 손실분담 등에 대한 합의를 슬기롭게 도출해 내야 합니다.

- 또한, 금융기관 스스로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,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인력 개발에 힘쓰며, 대출관행의 선진화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.

- 이러한 금융기관의 노력은 향후 구조조정의 성공과 시장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

□ 정부도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○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균형의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

- 금리·환율 등 거시금융변수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신축적인 통화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며,
- 이와 함께 환율·금리 등의 안정기조위에 연·기금의 증시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안정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.
- 또한, 우리 금융산업이 21C선도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지원노력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.

□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